**2장 정부와 지방자치**

**2-2 정부**

<그림> 정부 조직도

<연표> 정부 조직(행정 각부) 변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선출되며,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은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대통령의 통할하에 행정 각부를 두며,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또한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감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현 정부 조직은 18부, 5처, 17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개 부서의 소관 사무 영역은 ‛정부조직법’(시행 2018.6.8., 법률 제15624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다.

● 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경제 · 재정 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예산 · 기금의 편성 · 집행 · 성과 관리, 화폐 · 외환 · 국고 · 정부 회계 · 내국세제 · 관세 · 국제 금융, 공공 기관 관리, 경제 협력 · 국유 재산 · 민간 투자 및 국가 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교육부: 인적 자원 개발 정책, 학교 교육 · 평생 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 기술 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 평가,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 · 협력 · 진흥, 과학 기술 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 · 개발 · 생산 · 이용, 국가 정보화 기획 · 정보 보호 · 정보 문화, 방송 · 통신의 융합 · 진흥 및 전파 관리, 정보 통신 산업, 우편 · 우편환 및 우편 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외교부: 외교, 경제 외교 및 국제 경제 협력 외교, 국제 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 협정, 재외 국민의 보호 · 지원, 재외 동포 정책의 수립, 국제 정세의 조사 · 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통일부: 통일 및 남북 대화 · 교류 ·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 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법무부: 검찰 · 행형 · 인권 옹호 ·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국방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행정안전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 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 혁신, 행정 능률, 전자 정부, 개인 정보 보호, 정부 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원 · 재정 · 세제, 낙후 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선거 · 국민 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비상 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 예술 · 영상 · 광고 · 출판 · 간행물 · 체육 · 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 · 축산, 식량 · 농지 · 수리, 식품 산업 진흥, 농촌 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상업 · 무역 · 공업 · 통상, 통상 교섭 및 통상 교섭에 관한 총괄 · 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 기업, 산업 기술 연구 개발 정책 및 에너지 ·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보건복지부: 보건 위생 · 방역 · 의정(醫政) · 약정(藥政) · 생활 보호 · 자활 지원 · 사회 보장 · 아동 (영 · 유아 보육을 포함한다.) · 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환경부: 자연환경, 생활 환경의 보전, 환경 오염 방지, 수자원의 보전 ·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고용노동부: 고용 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 후생, 노사 관계의 조정, 산업 안전 보건, 산업 재해 보상 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여성가족부: 여성 정책의 기획 · 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 가족과 건강 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국토교통부: 국토 종합 계획의 수립 · 조정, 국토의 보전 · 이용 및 개발, 도시 ·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 하천 및 간척, 육운 ·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해양수산부: 해양 정책, 수산, 어촌 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 · 항만, 해양 환경, 해양 조사, 해양 수산 자원 개발, 해양 과학 기술 연구 · 개발 및 해양 안전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 · 종합, 중소기업의 보호 · 육성, 창업 · 벤처 기업의 지원, 대 · 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통령 선거**

<지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의 득표율 및 득표 순위

<표> 제18대 대통령 탄핵과 제19대 대통령 선거 절차

대한민국은 1987년 개헌 이후 5년 임기의 단임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만 19세 이상 국민의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제18대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라 2017년 5월 9일 치러졌으며, 투표율은 77.2%로 직전 대통령 선거보다 1.4% 높았다.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 투표가 실시되어 전체 유권자의 26.1%가 사전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재외 국민 약 22만 명이 재외 선거를 통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였다.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24.0%), 국민의당 안철수(21.4%), 바른정당 유승민(6.8%), 정의당 심상정(6.2%) 순으로 득표율을 얻었고, 기타 후보 8명의 득표율은 미미하였다. 17개 시도의 득표율을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는 14개 시도에서 최다 득표했으며, 홍준표 후보는 대구, 경북, 경남 3개 시도에서 최다 득표를 하였다. 전국 250개 시군구(일반구 포함)의 득표율을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는 175곳에서 최다 득표를 했으며, 홍준표 후보는 75곳에서 최다 득표를 했다.

**공무원 및 공공 기관**

<표, 그래프> 공무원 현황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약 109만 명이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나뉜다. 행정부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97.6%인 약 106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행정부 공무원은 크게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뉘며 지방 공무원은 지방자치 공무원과 교육자치 공무원으로 나뉜다.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전체의 3.4%이다. 공무원 통계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 중 통계 보고 의무(국가 공무원법 제18조)가 없는 경호 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과 국가 안보 관련 군인, 군무원, 국가안보실 직원은 제외된다.

직종별로는 국가 교육 공무원, 지방 일반직 공무원, 국가 일반직 공무원, 국가 경찰 공무원, 지방 교육자치 공무원, 지방 소방직 공무원 순으로 공무원이 많다. 국가 공무원의 부처별 현원(청 소속 공무원 포함)은 교육 공무원이 포함된 교육부, 외청인 경찰청 공무원이 포함된 행정안전부, 우정 관련 공무원이 포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정 및 출입국 관련 공무원 및 외청인 검찰청 공무원이 포함된 법무부, 외청인 국세청과 관세청 등의 공무원이 포함된 기획재정부 순으로 많다. 한편, 지방 공무원의 경우 현원은 일반적으로 인구에 비례하므로 인구가 많은 시도의 지방 공무원이 많다. 인구 만 명당 지방 공무원의 수는 인구 밀도가 높은 특별 · 광역시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은 도 지역이 많다.

<지도.> 행정부 공무원 분포

<그래프> 행정부 공무원의 성별, 연령별 분포

행정부 소속 국가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휴직자 제외)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실시한 공무원 총조사는 응답 대상자 1,000,227명의 95.6%인 956,096명이 참여하였다. 공무원 총조사에서는 공무원을 국가 공무원(행정부 소속 일반직, 외무, 검사, 별정직 국가 공무원), 경찰 · 소방 공무원(국가경찰 공무원과 지방자치경찰, 국가 · 지방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유 · 초 · 중등, 대학교 교원 및 교육 전문직 공무원), 지방 공무원(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소속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의 4가지로 구분하여 성별 · 연령별, 근무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55.0%, 여성 45.0로 여성 공무원은 2013년(41.4%)에 비해 3.6% 증가하였다. 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2008년 6급 이하 정년 연장 등의 사유로 2008년 41.1세에서 2013년 43.3세까지 증가했다가 2018년 43.0세로 약간 감소하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20대의 경우 경찰 · 소방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 공무원, 교육 공무원, 지방 공무원은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 공무원은 여성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 · 소방 공무원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근무 지역별 전체 공무원 수를 살펴보면 경기(182,280명), 서울(152,874명), 경남(66,041명) 순으로 공무원이 많았다. 국가 공무원의 경우 행정 중심 기능이 밀집한 서울(29,562명)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22,370명), 정부 청사가 이전한 세종(11,973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 · 소방 공무원 역시 서울(33,247명)이 경기(30,056명)보다 근무 인원이 많았다.

<지도> 공공 기관의 분포

<표> 중앙 부처의 공공 기관 정원 현황

<표> 공공 기관의 유형

공공 기관이란 정부의 투자 ·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 · 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공공 기관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유형별로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 기관(기금 관리형, 위탁 집행형), 기타 공공 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2019년 기준 공공 기관은 362개 기관(부설 기관 23개 포함)이며 정원은 약 38만 명(현원, 약 36만 명)이며,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신규로 제정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 공공 기관은 중앙 주무 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공 기관의 임직원 수가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약 26만 명에 이른다.

공공 기관은 과거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었으나, 수도권의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가 대두되었다.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2005년 공공 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개의 혁신 도시(원주, 진천 · 음성, 전주 · 완주, 나주, 김천, 대구, 진주, 울산, 부산, 서귀포) 건설을 중심으로 공공 기관 이전을 추진하였다. 2015년 말까지 118개의 공공 기관이 이전하였으며, 2018년 말 기준 153개 공공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였다.